

진실의 입 꼭 닫은 채...계속되는 5·18 거짓증언

전두환 재판 출석 계엄군들 위증죄 엄벌 목소리 높아 당시 1항공여단장 광주 방문해 놓고 "다녀간 적 없다"

헬기사격 특징·운용 속이자 검찰도 조목조목 짚어

전두환(88)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5·18 당시 계엄군들의 법정 증언이 '거짓 증언'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실 확인을 통해 위증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7차 증인신문과 지난 16일 8차 증인신문 등에 5·18 당시 항공 지휘관들과 헬기 조종사들이 전씨 측 증인으로 나섰다. 당시 광주를 다녀갔음에도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가 하면 헬기사격의 방식을 속이는 진술 등으로 거짓증언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5·18 전문가들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증인으로 나선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씨는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정주교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중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의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송씨는 또 "무장헬기 부대인 31항공단 방영제 대령은 광주에 파견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안 되었습니"라고 대답했지만, 1995년 특검 당시 방영제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5월 26일경 광주로 갔더니 UH-1H는 61단의 단장(대령)이 인솔하고 와 있었으며, 광주비행장에서 상주하며 병력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항공여단장의 광주방문과 부대 복귀 시점은 정호용 특전사령관의 동선과 일치한

■전두환 재판 거짓증언 보니

거짓 증언	사실
항공여단장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 없다.	항공병과사에 항공여단장 5월26일 오후 1시 10분~2시 45분 광주에 도착해 27일 오후 5시 45분 귀대했다는 기록
무장헬기 부대인 31항공단 방영제 대령을 광주에 파견한 사실 없다.	방영제씨는 1995년 특검에서 광주 방문사실을 밝히고 피터슨 목사가 제출한 헬기사진을 보고 한국에도 입지 않은 기종이라고 주장까지 함.
헬기사격 점사 사격시 총열에 탄이 걸려 점사 사격은 하지 않는다.	헬기 사격시 점사사격은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형태
예광탄은 고정비율로 섞여있다.	예광탄은 작전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섞일 수 있음.

다"며 "이는 5월 27일 상무중정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방영제 대령도 26일 광주에 왔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송진원씨의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지휘관급은 물론 법정에서 헬기 조종사들도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른다"며 거짓증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5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특히 일반인은 헬기조종과 헬기 사격 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이용, 헬기 사격의 특징과 일반적인 운용에 대해서도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5·18때 헬기조종사로서 재판정에 선 김씨와 서씨 등은 "500MD에 장착된 6열 기관총은 1단 사격시에 분당 2000발, 고속 사격시에는 분당 4000발이 발사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순간적으로 60발 정도가 발사된다"며 "헬기사격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점사사격(6-12발씩 끊어 쏘는 형태의 사격)을 할 경우 총알이 걸려서 안나간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현재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의 총알이 걸리는 것은 정비 불량일 때 가끔 발생하는 일이고, 끊어

서 사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헬기 사격의 경우 6발~12발 형태의 점사 사격이 가능하고, 실제 헬기 사격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5·18 연구자들은 "헬기조종사들은 과거 1989년 조비오 신부에 대한 고소장과 1995년 특검조사에서 본인들이 진술했던 거짓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새롭게 발굴된 군 기록과 군 관계자들의 새로운 증언, 전일빌딩 탄흔 발견 등에 배치된 거짓말이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재판부도 재판장에서 이들을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조목조목 짚어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전두환이 당당히 처벌받지 않고 있어 헬기 조종사들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헬기 조종사들의 위증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탈세 유흥주점 업주 벌금 45억원 '철퇴'

최근 7년간 40억원 이상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지역 유명 유흥주점(롤살롱)업주가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750만원에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모 유흥주점에서 부가가치세·개발소비세·종합소득세 등 총 43억4700만원을 포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소는 광주지역에서 유흥주점 중 매출 상위권을 다룰 정도로 유명한 업소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종합소득세 산정 시 누진세율을 피하고자 종업원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사업장 4곳을 등록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각각 다른 유흥주점에서 매출을 결제한 것처럼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현금 매출 6억 1600만원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다.

A씨는 2008년 2월부터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며 2015년부터 인근의 다른 건물로 업장을 옮겨 같은 상호로 영업을 계속해왔다. 앞서 광주 북구에서도 다른 상호로 카페형 유흥업소를 10년간 운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검, 총선 대비 불법선거 집중 단속

전담수사반 구성 등 엄단

광주지검이 내년 총선 대비 불법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금품·거짓말·불법 선전 선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최재봉 공공수사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계에 들어간다. 내년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광주지검은 이를 위해 지난 16일 검찰청 5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 등과 모여 선거 대비 유관 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관서와 24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수사 개시·입건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선 고발 전이라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는 ▲지역행사나 모임 참여 및 지원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설 명절 등 선물제공 ▲공천대가 수수 ▲후보 단일화 과정서 금품·향음 제공 ▲경선·본선 과정서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문자메시지 및 SNS 등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가짜뉴스 배포 ▲여론조사 빙자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이다.

윤대영 광주지검 전문 공보관은 "선거 사범에 대해선 대상자의 신분·지위·소득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건강계단 "굿~" 17일 광주 북구청사 내 건강계단이 설치돼 직원들이 로비부터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며 서신을 찍는 등 시설물을 체험하고 있다. 건강계단은 북구청을 비롯한 복지누리동과 북구치매안심센터, 일곡도서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암도서관, 북구평생학습센터 등 8곳에 조성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국장급 공무원 보석 기각

광주 민간공원 특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준준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형

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정삼(55·현 광산구부구청장)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특혜사업 2단계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제출하고 삼급자들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단속 첫날 음주운전 무더기 적발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지 하루 만에 만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서형.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첫날인 지난 16일 하루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3명,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 5명 등 총 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내년 1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예고한 광주경찰은 "음주단속 사전 예고·홍보에도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밤늦게 술자리를 즐기는 많은 금요일 밤은 대규모 단속에 나서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단속 등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